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는
당신의 **양심**입니다



Q1 공익신고는 왜 필요할까?

Q2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Q3 공익신고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



공익신고자보호제도로



안심 하고 신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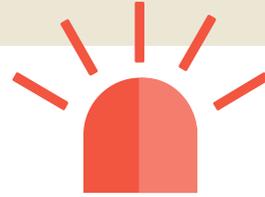
4 공익신고자를 지켜드립니다

5 공익신고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는 모두의
의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Q1

공익신고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

2007년 12월 7일



구미 L 제조업체
불산누출사고

2012년 9월 27일



S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2013년 1월 28일



여수 산단
폭발사고

2013년 3월 14일



시흥 시화공단
불산누출사고

2013년 5월 6일

만약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의 한강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은
실제 작업을 집행했던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 김모씨의
공익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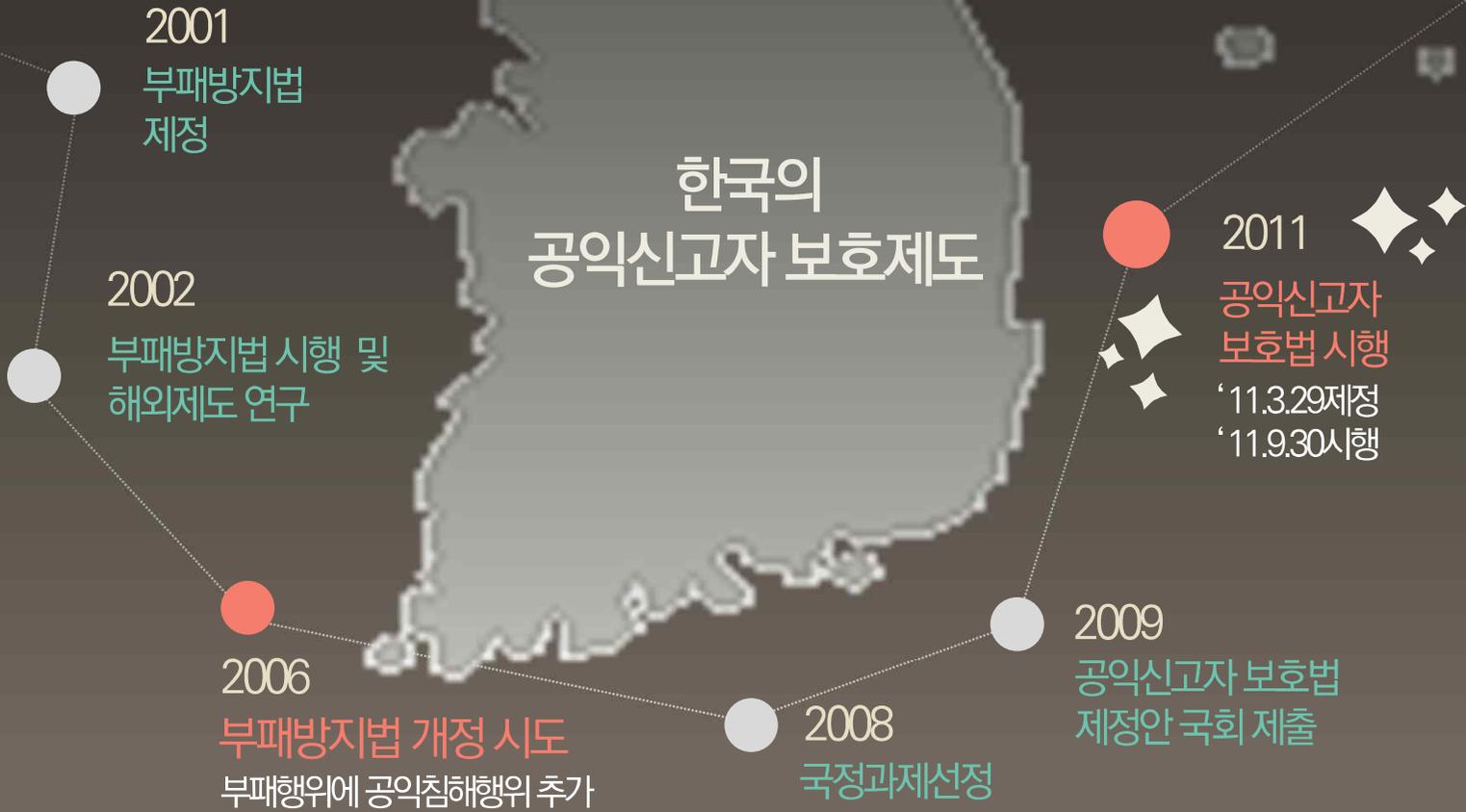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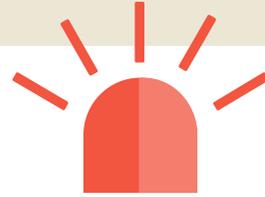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Q2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180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



LPG
가격 담합

※ 180개 법률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소비자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1. 건강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인체에 유해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 조제·판매



의료법, 약사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2. 안전분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가 기계 등
설비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3. 환경분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수산자원관리법

- 우연히 잡히거나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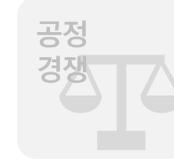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4. 소비자이익 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 여행계약의 고의위반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법 하도급 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의 부당한 상품공급 중단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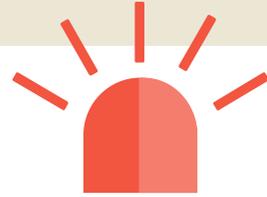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Q3

공익신고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Who?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Where?

국민권익위원회



180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행위 신고

수사기관



지방경찰서에 영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

행정 감독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고

공사 등 공공 단체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

국회의원



철도 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행위를
신고

기업의 대표자 · 사용자



불법하도급 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



공익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How?

- 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합니다.
-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익명의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나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법제 8조 제1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 예시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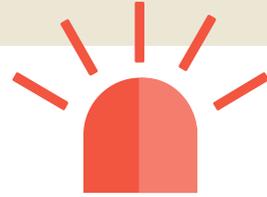
20 .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 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고발 또는 송치하게 됩니다. 동의[] 부동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공익신고자를 지켜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보조금 및 구상금

“ 공익신고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에게도 제공되는 법률상 권리 ”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보호
요청



신변보호
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면제가 가능합니다

형 및 징계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켜 드립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불이익조치 9가지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파면·해임·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징계·정직·감봉
강등·승진 제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인,허가 등의 취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보상금지급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억원까지 지급
※ 단,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미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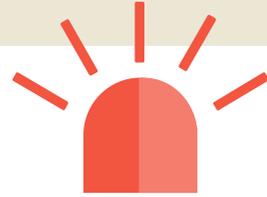
- 벌칙·통고 처분
-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구조금지급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 이사 등으로 소요된 비용
- 최대 36개월까지의 임금 손실액



공익신고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로 인한 국민의 건강관리 시스템의 발전”



공익신고 접수

대한적십자사의 B형 간염
검사장비 도입지연



장비도입과 B형 간염 검사 의무법제화
“국민의 건강관리시스템 발전”



“공익신고로 인한 철도 교량 안전시스템 확보”



공익신고 접수

KTX 낙동강 철교 보강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



전면 재시공 및 붕괴 위험 제거
“철도 교량의 안전시스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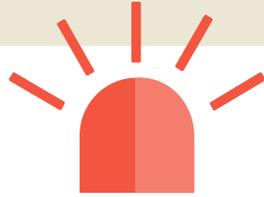
영국의 속담

공익신고는 적발, 처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주변사람의 모두가 예비 신고자라고 인식한다면
잘못된 행위자체를 하게 되지 않는
사전예방에 도움 되는 제도입니다

“블라인드 뒤에 있는 할머니를 조심하라”

공동체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신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
예방



공익신고자 보호는 모두의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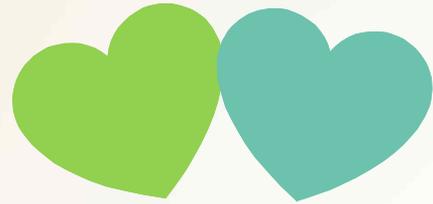
“거짓 연구임을 밝힌 제보자가 배신자??”



영화 '제보자'

공익신고자는 용기 있는 양심이며,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양심
공익신고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